

글로벌 경제안보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대아프리카 접근 전략: 콩고민주공화국(DR 콩고) 사례를 중심으로

황규득*

투고일자: 2026.07.27. 수정일자: 2026.08.07. 게재확정일자: 2026.08.10.

초록 본 연구는 미·중 패권 경쟁과 진영 블록화로 상징되는 글로벌 질서 재편 속에서, 한국이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 아프리카가 가지는 지정학적 가치를 평가한다. 첨단산업의 필수 요소인 핵심광물의 공급망 리스크가 증대하는 가운데,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의 출범은 기존의 단순 원자재 수출 구조에서 현지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지역가치사슬(RVC)’로의 구조적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서구의 추출 중심적 방식과 중국의 단방향 ‘인프라-자원 교환(infrastructure-for-resources)’ 모델이 가진 한계를 극복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 특유의 개발 경험과 첨단 제조 역량을 활용하여 아프리카의 자립적 산업화를 지원하는 가치 공유형 파트너십 모델인 ‘K-공유성장(K-Shared Growth)’ 모델을 제안한다. 이 전략의 유효성과 작동 메커니즘은 세계 최대 코발트 생산국인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사례를 통해 실증적으로 규명된다. DR콩고 정부의 자원 민족주의 정책과 미가공 광석 수출 규제는 현재 만성적인 전력난과 국내 제련 인프라의 부재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분산형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과 친환경·고순도 제련 기술을 함께 전수하는 한국의 ‘기술-자원 연계(R4T: Resource for Technology)’ 모델은 현지 부가가치 창출을 향한 DR콩고의 열망에 정확히 부합한다. 이 메커니즘은 한국 기업이 핵심광물을 장기적·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DR콩고는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현지 고용을 창출하는 상호 호혜적 윈-윈(Win-Win) 프레임워크를 구축한다. 나아가 한국은 로비토 회랑(Lobito Corridor) 및 지전략적 자원협력포럼(FORGE)과 같은 지정학적 다자물류·안보 플랫폼에 전략적으로 정합하여 투자 리스크를 분산하는 한편, 스마트 인프라 및 디지털 핀테크 플랫폼 전수를 통해 아프리카의 ‘단계도약(Leapfrogging)’을 지원해야 한다. 이와 함께 ODA와 연계된 정책금융 보증 기전을 강화하여 민간 기업의 투자 진입 장벽을 낮추는 다층적 G2G 및 PPP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광물 이력 추적 시스템 등 현지 맞춤형 ESG 기준을 선제적으로 수립함으로써, 미국 IRA 및 유럽 CRMA 등 글로벌 규범에 부합하는 ‘클린 공급망’을 조성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아프리카의 진정한 성장을 돕는 파트너이자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자리매김할 때, 다가오는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를 함께 돌파할 강력한 경제안보 연대를 완성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황규득(2026)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 한국의 대아프리카 ‘K-동반성장’ 전략 연구: 경제안보와 공급망 가치사슬(GVC)의 정합성 분석을 중심으로” 논문 제목하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사례를 중심으로 수정·보완함.

* 주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학부 교수(kyudeug@hanmail.net)

I. 들어가면서

최근 미·중 간 지경학적 경쟁의 격화와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그리고 기후 변화 위기 속에서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공급망 블록화와 자원 무기화 경향은 대외 의존형 제조 강국인 한국에게 실존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RMA) 등은 공급망의 탈중국화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제 핵심광물의 안정적 조달처 확보는 단순한 경제적 거래를 넘어 국가 생존의 최우선 순위인 경제 안보의 핵심 변수로 격상되었다(오일석 & 조은정 2022).

이러한 지경학적 대전환기 속에서 아프리카 대륙은 단지 시혜적 원조의 대상으로서 가난한 대륙이 아닌, 다변화하는 세계 경제 속 새롭게 부각되는 주체적 행위자이자 글로벌 사우스의 핵심 거점으로 재발견되고 있다(황규득, 2026). 아프리카는 전 세계 핵심광물 매장량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USGS, 2025),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의 본격 가동을 통해 14억 인구 규모의 거대 단일 시장을 형성하며 국제질서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강대국 간의 경쟁 사이에서 실익을 챙기는 선택적 다변화 전략을 구사하며 자신들의 ‘위치권력(Positional Power)’을 강화하고 있다(이재훈 외, 2019; 김태균, 2024; World Bank, 2020).

과거 한국의 대아프리카 정책이 단기적인 자원 조달이나 일회성 개발 원조(ODA)에 치중했다면, 현시점에서는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과와 2026년 출범한 신정부의 실용주의 외교 기조를 바탕으로 보다 다각적이고 중장기적인 상생형 경제외교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외교부, 2024; 국무조정실, 2026). 한국은 식민 지배의 아픔을 공유하면서도 단기간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고유한 발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서구의 규범 강요나 중국의 자본 중심적 접근과 차별화되는 강력한 외교적 자산이다(Fadiga, 2024).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글로벌 자원 전쟁의 최전선이자 고위험·고수익의 전형인 콩고민주공화국(DRC)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취해야 할 다각적인 접근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미·서방을 중심으로 단순 소다자 투자를 넘어 핵심광물과 첨단 기술(AI·반도체) 가치사슬 전체를 통합 관리하려는 지전략적 자원협력포럼(FORGE) 및 팩스 실리카(Pax Silica) 등 새로운 다자 안보 체제가 등장하는 지경학적 역동성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후발 주자인 한국이 미·서방의 규범·안보 플랫폼에 정합하여 진입 리스크를 분산하는 동시에, 차별화된 ‘기술-자원 연계(R4T)’ 및 인프라 결핍을 혁신으로 돌파하는 ‘단계도약’의 실무적 메커니즘을 결합함으로써(Signé, 2023), 강대국 간 패권 경쟁 속에서 독자적인 지경학적 자율성을 확보하

고 한국의 경제안보와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대아프리카 전략의 지정학적 접근과 기술·규범 중심의 파트너십

1. 경제안보 패러다임과 중견국의 지정학적 자율성

지경학(Geoeconomics)적 관점에서 핵심광물은 단순한 무역 상품이 아니라 국가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관철하고 상대국을 압박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규정된다. 특히 미·중 패권 경쟁이 기술 규제와 공급망 다변화 압박으로 고착화되면서, 자원 보유국이 자국 내에서 제련 및 가공 공정을 강제하는 ‘자원 민족주의’와 결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박소영, 2025; IEA, 2023).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선 다변화와 국책 금융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으나, DR콩고와 같이 정치적 거버넌스가 취약한 ‘고위험·고수익’ 환경에서 한국과 같은 후발 중견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득권 장벽을 뚫고 진입할 것인가에 대한 실무적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강대국과는 차별화된 틈새 접근의 맥락 하에서, 한국의 고도화된 제조·디지털 기술력을 아프리카의 현지 자원 및 노동력과 결합하여 상호 호혜적인 글로벌 가치사슬을 구축하는 전략적 접근은 단순한 시혜적 원조를 넘어선다는 점을 강조한다(황규득, 2026). 이는 자본 투입 중심의 중국식 일대일로(BRI) 모델이나 가치·제도 조건을 강요하는 서구식 모델과 달리, 아프리카의 자생적 산업화 열망과 한국의 공급망 안정화라는 실익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기술 이전과 현지 가공 공정을 패키지화하는 가치 공유형 모델이다(Ibid.).

2. 인프라 결핍과 기술 수용의 ‘단계도약(Leapfrogging)’ 메커니즘

최근 아프리카의 디지털 혁신은 주로 케냐, 나이지리아 등 동·서아프리카의 정보통신(ICT) 선도국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중부 아프리카의 자원 부국이자 인프라 지표가 최하위권인 DR콩고의 경제 구조와 연계된 연구는 거의 전무했다(강문수, 2020; 박영호 외, 2016). 그러나 기술 수용의 ‘단계도약’ 이론에 따르면, 유선 인프라와 중앙 집중형 시스템이 부재한 환경일수록 모바일 기반 핀테크와 분산형 재생에너지 네트워크 같은 파괴적 혁신 기술이 기존 기득권의 저항 없이 더욱 신속하게 정착할 수 있다(Signé, 2023).

따라서 본고는 DR공고의 전력 및 금융 결핍을 역설적으로 한국형 디지털 인프라 표준을 이식할 수 있는 기회의 창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을 시도한다(황규득 외, 2015; 이성규 외, 2023). 대규모 국가 전력망 구축 단계를 건너뛰고 친환경 마이크로그리드로 직행하거나, 전통적 은행망 없이 모바일 핀테크와 디지털 신원 인증(DID)으로 진입하는 기술 중심 파트너십은 한국의 고도화된 정보통신 및 에너지 제조 역량이 글로벌 사우스의 구조적 결핍과 만날 때 발생하는 독창적인 협력 도구이다(강문수, 2020; 이성규 외, 2023; Signé, 2023).

3. 규범 정합성과 신뢰 자산(Trust Asset) 중심의 공공외교

국제 규범의 정합성 측면에서, 환경·사회·거버넌스(ESG) 및 공급망 실사 지침의 확산은 자원 개발의 새로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OECD 2016). 새천년 이후 DR공고산 핵심광물이 안고 있는 분쟁 광물 지정 및 아동 노동 이슈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치명적인 평판 리스크를 야기함을 경고해 왔다(Hund et al., 2020). 본 연구는 이러한 규범적 제약을 블록체인 기반의 이력 추적 기술과 결합하여, 서구의 엄격한 통상 규제(미국 IRA, 유럽 CRMA)를 충족하는 ‘책임 있는 조달’ 체계로 전환하는 실무적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규범 준수가 어떻게 차별화된 경쟁 우위가 될 수 있는지를 조명한다(오일석·조은정, 2022; OECD, 2016).

마지막으로 공공외교 이론의 맥락에서도, 소프트파워 지표로서의 한류 확산이 아프리카 현지에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 개선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적 협력과 기업 진출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Ochieng & Kim, 2019; 이유리, 2021). 이러한 한류 확산은 한국 문화 콘텐츠에 노출된 글로벌 사우스의 소비자들이 한국산 제조 상품과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문화적 후광 효과(Halo Effect)’를 증명해 왔다(Ochieng & Kim, 2019). 본 연구는 이러한 문화적 자산과 농업 기술(K-라이스벨트), 직업 훈련(HRD)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자원 확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지의 반발을 상쇄하고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의 토대가 되는 ‘신뢰 자산(Trust Asset)’ 형성 메커니즘을 제시하고자 한다(농림축산식품부, 2025; 정상화 외, 2012).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기존의 거시적 담론에 머물지 않고, 자원 잠재력은 극대화되어 있으나 정치적·지정학적 불안정성이 매우 높아 대표적인 ‘전략적 인내 및 다자 협력 구역’으로 분류되는 DR공고를 주요 사례로 살펴본다(이머릭스, 2022). 이를 통해 중견국인 한국이 단독 투자 위험을 회피하면서 독자적인 전략적 자율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경제안보, 지정학, 기술 및 규범 정합성의 교차 공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오일석·조은정, 2022; 한선이 외, 2024; 황규득, 2026).

III.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의 지경학적 환경과 공급망 진입 장벽

1. 글로벌 배터리 가치사슬의 요충지와 중국의 독점적 기득권

DR콩고는 전 세계 코발트 공급량의 70% 이상을 생산하는 절대적 공급처이며, 지표면 근처에 막대한 양의 고품질 구리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 4차 산업혁명의 필수재인 희토류가 매장되어 있는 지경학적 요충지이다(USGS, 2025; Hund et al., 2020). 따라서 대외 의존형 제조 강국인 한국의 배터리 및 자동차 산업의 미래 경쟁력은 DR콩고산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 여부와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박소영, 2025).

그러나 현재 DR콩고의 광업 생태계는 후발 주자인 한국이 진입하기에 매우 가혹한 장벽이 형성되어 있다. 이는 2000년대 중반부터 자본을 투입해 온 중국 기업들이 DR콩고 내 주요 코발트 및 구리 광산 지분의 70% 이상을 독점하며 자국 중심으로 가치사슬을 완전히 내재화했기 때문이다(Alden, 2007; IEA, 2023). 중국식 모델은 과거 조셉 카빌라(Joseph Kabila) 정권 시절 대규모 차관 제공과 신속한 도로·항만 등 인프라 건설을 맞교환하는 ‘인프라-자원 교환’ 방식을 취해왔으나, 현지 노동력을 배제하고 자국 인력만을 투입하는 고립된 경제(Enclave Economy)를 형성함으로써 실질적인 기술 전수나 고용 창출 효과가 미비하다는 현지의 강력한 비판과 저항에 직면해 왔다(Alden 2007; 양지원 외 2024).

2. DR콩고 치세케디 정부의 지경학적 대응: ‘윈-윈(Win-Win)’ 구조로의 재협상과 규제 강화

이러한 중국의 독점적 기득권과 구조적 불균형에 대응하여, 펠릭스 치세케디(Félix Tshisekedi) DR콩고 정부는 자원 주권을 회복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능동적인 지경학적 카드들을 꺼내 들고 있다. 치세케디 대통령은 과거 잘못 체결된 계약으로 인해 국민들이 여전히 도탄에 빠져 있다며 대대적인 광업 계약 재조정을 단행했다(AFP-Agence France Presse, 2021; Aljazeera, 2021). 치세케디 정부는 재정 재검토를 단행한 후, 중국 측이 수십억 달러의 이득을 취하는 동안 DR콩고에 돌아온 인프라 혜택은 극히 미미했음이 밝혀지자, 중국 컨소시엄(Sicomines)과의 끈질긴 재협상 끝에 70억 달러(약 9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금융을 추가로 확보받는 재협상 성과를 거두었다(Reuters, 2024; EITI, 2024).¹⁾

1) 글로벌 광업 거버넌스 기구인 EITI(채굴산업투명성이니셔티브)의 도움을 받아 DR콩고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추가 인프라 금융 및 가치를 재협상할 수 있었는데, 당시 2024년 재협상의 핵심은 DR콩고 정부가 과거 카빌라 정권 시절의 불평등 계약(Sicomines)을 치세케디 대통령 주도로 뒤엎고 압박하여 매년 최소 3억 2,400만 달러씩 2040년까지 총 70억 달러를 오직 콩고 내 도로 등 인프라 건설에만 재투자하라는 약속을 받아낸 점이다.

아울러 DR콩고 정부는 단순 원광 수출국에서 벗어나 현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자원 민족주의 성격의 규제 혁신도 병행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불법 영세 광산(Artisanal Mining)을 단속하고 공급망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적성(Traceability)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정련·가공되지 않은 미정제 코발트의 일시적 수출 중단 조치를 내리는 등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시황을 쥐고 흔드는 ‘위치 권력’을 적극 행사하고 있다(IEA, 2025).²⁾ 이러한 대응은 한국과 같은 후발 제조국들에게 단순 자원 매입을 넘어 ‘현지 제련 인프라 구축 및 기술 이전’을 결합한 파트너십 제안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3. 다자간 지정학적 균열과 외교적 다변화: ‘로비토 회랑(Lobito Corridor)’과 미·EU 밀착

중국에 편중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DR콩고 정부의 외교적 다변화 전략은 서구권의 지정학적 반격과 맞물려 ‘로비토 회랑(Lobito Corridor)’ 프로젝트의 가속화로 나타나고 있다(황규득, 2026). 치세케디 정부는 미국 주도의 광물안보파트너십(MSP) 및 글로벌 인프라·투자 파트너십(PGII) 기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대서양으로 향하는 물류 대동맥인 로비토 회랑 철도 현대화 사업에 전폭적인 국가적 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The White House, 2022; Lunardini & Tshuma, 2026).

나아가 DR콩고 정부는 미국과 ‘U.S.-DRC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을 공식 발효하고 합작 운영 위원회(Joint Steering Committee)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DR콩고 정부가 자국 내 우량 광물 자산을 ‘전략적 자산 예비령(SAR, Strategic Asset Reserve)’으로 지정하여 미국 등 신뢰할 수 있는 서방 파트너 기업에 우선 접근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U.S. Department of State, 2026a). 이는 강대국 간의 패권 경쟁 속에서 자국의 핵심광물을 지렛대 삼아 안보 보장과 투명한 투자 유치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고도의 외교적 실용주의 전략이다(Klingebiel, 2023; U.S. Department of State, 2026a).

이러한 미·서방의 대아프리카 핵심광물 개입은 2022년 출범한 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넘어, 광물 채굴에서 첨단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지정학적 가치사슬 재편 전략으로 한 단계 진화하고 있다. 특히 2025년 12월 미국 주도로 출범한 ‘팍스 실리카(Pax Silica)’와³⁾ 2026년 2월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Critical Minerals Ministerial)’에서 제시된 ‘지전략적 자원협력 포럼(FORGE: Forum on Resource Geostrategic Engagement)’은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 축이다. 기존

2) DR콩고 정부의 전략광물 규제 당국인 ARECOMS(전략광물 시장규제통제청)는 시장 내 공급 과잉 대응과 가격 안정을 위해 2025년 2월 22일부로 코발트 수출을 전격 중단(Decision No. 001/ARECOMS/2025)하고, 이후 이를 수차례 연장한 뒤 쿼터제를 도입하였다

3) <https://www.state.gov/pax-silica>

MSP가 우방국 중심의 소다자 간 프로젝트 발굴과 투자 협력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FORGE는 정책 조정과 프로젝트 실행, 그리고 공급망 전체의 지정학적 통합 관리를 지향한다. 이는 단순히 중국 이외의 광물 공급원을 확보하는 단계를 넘어, 핵심광물의 채굴·정제·가공에서부터 배터리, 반도체, AI 등 최첨단 제조 산업에 이르기까지 가치사슬의 병목(Bottleneck) 전체를 우방국 네트워크로 통제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다(U.S. Department of State, 2026b). 결과적으로 DR콩고의 코발트와 구리 등 아프리카의 전략 광물은 단순한 원자재를 넘어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신기술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공급망 자산으로 그 성격이 격상되고 있다.

4. 고질적인 정치·사회적 리스크와 거버넌스 한계

DR콩고 정부의 이러한 다각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DR콩고는 동부 지역의 고질적인 반군(M23) 활동과 이웃국과의 밀수 갈등, 그리고 정부 관료 사회 내부의 부패와 행정력 공백이라는 고질적인 구조적 리스크를 떠안고 있다(이머릭스, 2022; BTI, 2026). 세계은행의 세계 거버넌스 지표(WGI)나 국제 채굴산업투명성이니셔티브(EITI) 평가에서 여전히 거버넌스 건전성은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환경 파괴와 아동 노동 이슈는 글로벌 평판 리스크로 상존한다(World Bank, 2024; CrossBoundary Advisory & EITI, 2026). 따라서 한국의 접근 전략은 DR콩고 정부의 ‘자원 민족주의 및 가공 산업 고도화’ 열망을 충족시켜 주면서도, 현지 거버넌스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정교한 플랫폼 연계 모델이어야 한다.

IV. 글로벌 공급망 재편기 한-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상생협력 전략

1. 글로벌 공급망 환경 변화와 아프리카의 전략적 가치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및 자원 패권 경쟁이 전방위적으로 심화됨에 따라,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던 기존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체제는 블록화와 다변화라는 근본적인 기로에 서 있다(오일석·조은정, 2022). 이러한 공급망 다변화 압박 속에서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처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중견국들의 전략적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는 양상이다(주재우, 2022). 특히 아프리카 대륙은 현대 첨단 산업의 필수재이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핵심인 코발트, 리튬, 망간, 백금 등 핵심광물의 전 세계 매장량 중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그 지정학적·지경학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USGS, 2025; Hund et al., 2020).

이러한 지경학적 대전환 국면은 대한민국 배터리 및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다.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제조 및 배터리 양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핵심광물의 대외 의존도가 극도로 높아 공급망 교란에 매우 취약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박소영, 2025). 따라서 리스크를 분산하고 안정적인 원자재 조달처를 확보해야 하는 한국의 실리적 처지에서 아프리카와의 중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은 국가 경제 안보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최우선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국무조정실, 2026).

아프리카 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의 본격적인 가동은 인구 14억 명, 국내총생산(GDP) 총합 3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단일 시장의 탄생을 의미하며 대륙 내부의 산업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이재훈 외, 2019; World Bank, 2020). AfCFTA는 단순한 관세 장벽의 철폐라는 교역 증대 효과를 넘어, 과거 제국주의 시절부터 이어져 온 대륙 내 분절된 개별 시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거시적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이재훈 외, 2019; Klingebiel, 2023).

이에 따라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에서는 원자재를 제련이나 가공 과정 없이 가치사슬 하향식으로 원광 형태 그대로 직수출하던 종속적 구조(Extractivism)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륙 내부에서 부품 가공과 1차 제련, 그리고 최종 조립까지 연계하는 ‘지역 가치사슬(Regional Value Chain, RVC)’ 구축 담론이 활발히 전개되는 이유이다(energytransitionafrica, 2025). 특히 세계 최대 코발트 생산국인 DR콩고를 중심으로 한 중부 아프리카 자원 벨트에서는 역내 부가가치 창출을 강제하는 정책적 대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Cook, 2025). 한국은 아프리카의 이러한 자생적 산업화 열망과 구조적 변화를 정확히 포착하여, 기존의 단기 수입 중심 접근법을 탈피한 진입 전략을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

2. 한국형 상생협력(K-Shared Growth) 모델의 개념과 지향점

과거 서구 열강이 보여준 식민지적 자원 수탈 방식이나, 최근 중국이 주도해 온 자본 투입 중심의 ‘인프라-자원 맞교환(Angola Mode)’ 방식은 철저히 일방향적인 자원 확보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Alden and Alves, 2009). 이러한 약탈적 가치사슬 모델은 아프리카 현지의 실질적인 고용 창출이나 기술 전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자원 부국 내에 고립된 경제만을 형성하여, 결과적으로 현지 사회의 거센 반발과 환경 파괴라는 부작용을 초래했다(Alden, 2007; Alden and Alves, 2009; Hund et al., 2020).

반면 한국의 독자적인 성공적 개발 경험을 무형의 핵심 자산으로 삼는 한국형 상생협력 전략은 아프리카의 자원을 일방적으로 편취하는 기존 기득권 구조와 명확한 선을 긋는다. 한국형 상생협력 모델은 아프리카 자원국들의 구조적 결핍을 해소함과 동시에 한국의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는 가치 공유형 파트너십을 지향한다(황규득, 2026). 이는 대한민국이 가진 비식민 역사성의 도덕적 우위와 선진 원제조 기술력을 결합하여, 아프리카 대륙의 자립적 산업화와 인적 자원 개발을 다각도로 지원함으로써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 체계를 정립하는 것을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삼는다(Fadiga, 2024; 황규득, 2026).

한국형 상생협력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공적개발원조(ODA)를 마중물로 삼아 민간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는 ‘원조와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체계화해야 한다(정상화 외, 2012; 국무조정실, 2026). 한국이 단기간에 선진국으로 도약하며 이룩한 제조업 역량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고도화된 산업화 노하우를 아프리카 현지 실정에 맞춰 이식하는 지식공유사업(KSP)의 전방위적 확장이 요구된다(강성진, 2025).

특히 이러한 지식 공유가 단순한 이론적 컨설팅에 머물지 않고 우리 기업의 제조 핵심 기술 이전과 결합할 때 그 파급력은 극대화된다. 기술 이전과 지식 공유의 융합 패키지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강대국 간의 공급망 틈바구니에서 단순 원자재 공급처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고,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고부가가치 행위자로 당당히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를 제공한다(한선이 외, 2024).

3. 한-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상생협력의 핵심 전략 및 메커니즘

한국형 상생협력을 현실 정치경제 무대에서 작동시키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으로서 기술-자원 연계(Resource for Technology, R4T)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황규득, 2026). 이 모델은 자원 보유국이 한국 기업에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장기 공급 및 우선 접근권을 보장하는 대가로, 한국은 이에 상응하는 친환경 고순도 제련 가공 기술을 전수하고 현지 정련 시설을 공동 구축하는 구조이다(양지원 외, 2024; 한선이 외, 2024).

이러한 R4T 메커니즘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최전선인 DR콩고 사례에 투사하면 고도의 외교·경제적 시너지가 도출된다. 현재 DR콩고의 펠릭스 치세케디(Félix Tshisekedi) 정부는 중국의 코발트 광산 독점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해 기존 계약의 재협상을 단행하고 미가공 원광 수출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자원 민족주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Reuters, 2024; EITI, 2024). 만성적인 전력난과 인프라 결핍으로 제련 시설을 돌리지 못해 원광을 중국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DR콩고에게, 한국의 독보적인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친환경 제련 공정 기술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R4T 모델은 치세케디 정부의 정책적 열망을 정확히 충족시킨다(이성규 외, 2023; IEA, 2025).

우리 기업은 DR콩고 내 핵심 코발트 및 리튬 광산의 장기 오프테이크(Off-take) 권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DR콩고는 자국 광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여 내수 일자리를 창출하는 완벽한

윈-윈(Win-Win) 구조가 성립되는 것이다(Resources Matters, 2025). 또한, 이러한 유기적인 양자간 신뢰를 바탕으로 출범한 ‘한-콩고민주공화국 공동위원회’ 등 정부 차원의 G2G 채널은 중견국인 한국이 단독 진입의 위험을 피하면서 독자적인 자율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안전판 역할을 수행한다(오해령, 2026).

DR콩고의 극심한 인프라 단절과 금융·에너지 결핍은 역설적으로 기존의 발전 단계를 건너뛰고 첨단 기술 표준으로 직행하는 ‘단계도약’에 있어 최적의 토양이 된다(Signé, 2023). 한국은 서구권이 중국의 물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 중인 다자간 지정학적 물류 플랫폼인 ‘로비토 회랑(Lobito Corridor)’ 프로젝트와 지전략적 자원협력 포럼(FORGE)에 전략적으로 편승하여 개별 기업의 진출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박소영, 2025). 로비토 회랑 인프라 노선을 따라 한국의 스마트 항만,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그리고 분산형 재생에너지 표준인 스마트 마이크로그리드(Microgrid) 전력망을 ODA 자금과 결합하여 이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이성규 외, 2023; CrossBoundary Advisory & EITI, 2026).

이러한 미·서방의 고도화된 다자 이니셔티브 재편은 후발 주자인 한국에게 새로운 지정학적 연대의 기회와 전략적 과제를 동시에 제공한다. 한국은 단순한 광물 매입국을 넘어, 핵심광물에서 첨단 반도체 및 AI 기술로 이어지는 가치사슬 통합을 목표로 하는 ‘팍스 실리카(Pax Silica)’와 ‘FORGE’ 체제 내에서 독보적인 제조·가공 기술을 보유한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특히 미·서방 다자 플랫폼의 지정학적 우산과 한국의 ‘기술-자원 연계(R4T)’ 모델을 결합하는 삼각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서방의 FORGE 플랫폼을 통해 DR콩고 진출에 따른 정변 및 거버넌스 리스크를 분산하고, 미국의 ‘프로젝트 볼트(Project Vault)’⁴⁾ 등 국제 비축폐쇄망 파트너십과 연계하는 한편, 현지 제련·가공 기술 이전과 분산형 친환경 에너지(ESS/마이크로그리드) 이식은 한국이 주도하는 정교한 분업 구조를 완성해야 한다. 이는 한국이 미·중 간 대립 구도 속에서 서구의 안보·규범 체계(FORGE/Pax Silica)에 정합하면서도, 아프리카 국가들의 자립적 산업화 열망을 충족시키는 독자적인 지정학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핵심 전략 기전이 될 것이다.

또한 전통적 시중 은행망이 부재한 DR콩고의 구조적 결핍 메커니즘을 돌파하기 위해, 한국의 선진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핀테크 플랫폼과 디지털 신원 인증(DID) 표준을 전자정부 구축 사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강문수, 2020; 황규득 외, 2015). 대규모 유선 인프라를 건너뛰고 디지털 금융과 분산형 친환경 그린 에너지를 직수출하는 단계도약 지원은, 현지 청년층을 숙련공으로 양성하는 ‘K-직업훈련센터’ 및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K-라이스벨트’ 공공외교와 맞물려 서구 및

4) 미국의 프로젝트 볼트(Project Vault)는 중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26년 2월 공식 발표한 약 120억 달러(약 17조 원) 규모의 국가 핵심광물 전략 비축계획이다.

중국 모델과 차별화되는 한국형 동반성장 모델의 강력한 도덕적 신뢰 자산(Trust Asset)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농림축산식품부, 2025; 이유리, 2021; Signé, 2023).

4. 한국형 상생협력 전략의 실행 과제

한국형 상생협력 전략이 범정부 차원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적 인프라와 국책 금융 지원을 결합한 다층적인 협력 체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김성배 외, 2024). 우선 아프리카 국가들의 개별적인 지경학적 특성과 AfCFTA의 거시적 무역 규범을 면밀히 고려하여, 유연하고 맞춤형된 형태의 경제동반자협정(EPA)이나 무역투자자유화협정(TIPF) 체결을 다변화하여 통상 환경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이재훈 외, 2019; 주재우, 2022).

특히 DR콩고와 같이 비상업적 투자 리스크가 극도로 높은 지역에 민간 기업의 선제적 진출을 유도하려면 민관 파트너십(PPP) 보증 기전의 획기적인 강화가 필수적이다(이머릭스, 2022). 외교부, 산업부, 기재부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하에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특별계정을 연계한 ‘한-아프리카 경제안보 공급망 펀드’를 조성하고, 현지 가공 공정이나 스마트그리드 건설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에게 파격적인 자금 대출 우대 및 정변·자산 몰수 리스크를 100% 분담해주는 정책적 안전판을 제도화해야 한다(국무조정실, 2026; 이머릭스, 2022).

마지막으로 한-아프리카 동반 성장이 단기적인 자원 확보 성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험 사업을 글로벌 규범에 부합하는 사회·환경적 책임(ESG) 가치와 긴밀히 정합시켜야 한다(Hund et al., 2020). DR콩고산 핵심광물이 직면한 가장 취약한 고린인 아동 노동 등 인권 유린과 분쟁 광물 평판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채굴 단계부터 한국의 강점인 블록체인을 접목한 ‘광물 이력 추적 디지털 플랫폼’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OECD, 2016).

OECD 실사지침을 완벽히 충족하는 책임 있는 공급망 가이드라인을 통과한 핵심광물은 미국 IRA 및 유럽 CRMA 규범의 통상 규제를 자동 통과하는 ‘클린 공급망(Clean Supply Chain)’ 지위를 획득하여 우리 첨단 제품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누적적으로 강화하게 된다(오일석·조은정, 2022). 자원 개발 과정에서 현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현지 맞춤형 ESG 표준을 확립할 때, 대한민국은 아프리카 현지 사회로부터 진정성 있는 전략적 중추 파트너로서의 대체 불가능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황규득, 2026).

V. 결론

본 연구는 미·중 패권 경쟁 심화와 블록화 경향으로 대변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기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 안보의 외연을 넓히고 공급망 다변화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 아프리카의 지정학적 가치를 재평가하였다. 특히 현대 첨단 산업의 필수재인 코발트, 리튬 등 핵심광물의 전 세계적 공급망 리스크가 고조되는 국면에서, 아프리카 대륙은 단순한 원자재 공급처를 넘어 국가 경제의 생존과 자율성을 좌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더해 아프리카 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의 본격적인 가동은 분절되었던 역내 시장을 통합하고, 단순 원광 수출국에 머물던 과거의 종속적 구조에서 벗어나 역내 부가가치를 높이는 ‘지역 가치사슬(Regional Value Chain, RVC)’로의 구조적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대륙 내부의 거시적 패러다임 변화는 과거 서구 열강의 약탈적 자원 수탈이나 중국이 주도해 온 일방향적 ‘인프라-자원 맞교환’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개발 경험이라는 무형 자산과 고도의 제조업 역량을 결합하여 아프리카의 자립적 산업화를 지원하는 가치 공유형 파트너십인 한국형 상생협력 모델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한국형 상생협력 모델은 아프리카 자원국들이 직면한 구조적 결핍을 해소하는 동시에 한국의 공급망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양자 간의 도덕적 신뢰와 호혜성을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 체계를 지향한다(Fadiga, 2024; 황규득, 2026).

이러한 상생협력 전략의 실효성과 구체적인 작동 기전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최전선이자 세계 최대 코발트 생산국인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사례를 통해 실증적으로 구체화된다. 현재 DR콩고 치세케디 정부가 추진 중인 자원 민족주의적 규제와 미가공 원광 수출 제한 조치는 만성적인 전력난과 제련 인프라 부족이라는 내부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Reuters, 2024; 이성규 외, 2023). 이 지점에서 한국이 보유한 친환경 고순도 제련 가공 기술과 분산형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을 패키지로 전수하는 ‘기술-자원 연계(R4T)’ 모델은 DR콩고의 역내 부가가치 창출 열망을 정확히 충족시킨다(이성규 외, 2023; IEA, 2025).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은 핵심광물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우선 접근권을 확보하고, DR콩고는 자국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내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상호 호혜적인 윈-윈(Win-Win) 관계를 정립할 수 있다(양지원 외, 2024; Resources Matters, 2025).

아프리카 대륙, 특히 인프라가 극도로 낙후된 DR콩고의 역설적인 특징은 기존의 유선 통신이나 대규모 중앙 집중형 전력망 단계를 건너뛰고 모바일과 분산형 재생에너지로 직행하는 ‘단계 도약’ 현상이 가장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최적의 토양이라는 점이다. 이는 한국이 로비토 회랑과 같은 지정학적 물류 플랫폼뿐만 아니라, 최근 출범한 ‘팍스 실리카(Pax Silica)’ 및 ‘지전략적

자원협력포럼(FORGE)’ 등 미·서방의 고도화된 다자 안보 체제에 전략적으로 연계하여 개별 기업의 정치·거버넌스 진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분산해야 함을 시사한다. 나아가 서방 다자 플랫폼의 지정학적 안전판 위에 한국 주도의 스마트 항만, ITS, 디지털 핀테크 플랫폼 및 분산형 그린 에너지(ESS/마이크로그리드) 기반의 R4T 모델을 결합하는 삼각 협력 구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은 미·중 대립 속에서 서구의 안보·규범 체계에 부합하면서도, 아프리카의 자립적 산업화 열망을 충족시키는 독자적인 지정학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한국은 이러한 결핍을 단순한 원조의 대상이 아닌 한국형 디지털·에너지 플랫폼 선점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와 동시에 ODA 자금과 연계된 정책금융 보증 기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민간 기업의 투자 진입 장벽을 낮추는 다층적 G2G 및 PPP 협력 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 최종적으로 한-아프리카 파트너십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광물 이력 추적 시스템 도입 등 글로벌 규범에 부합하는 현지 맞춤형 ESG 기준을 선제적으로 수립함으로써 미국 IRA 및 유럽 CRMA 체제에 완벽히 정합하는 ‘클린 공급망’을 조율해 나가야 할 것이다(Hund et al., 2020; OECD, 2016). 결론적으로 한국이 아프리카의 진정한 성장 동반자로서 진정성 있는 전략적 중추 국가의 위상을 확립할 때, 한-아프리카는 다가오는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를 함께 돌파할 강력한 경제안보 연대를 완성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문수 (2020). 아프리카 디지털 산업의 성장과 한국과의 협력 과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6), 1-19.
- 강성진 (2025). 국제경제 및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및 지식공유사업(KSP)의 역할. 지식 공유 Brief, 3호,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3-4.
- 국무조정실 (2026).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 서울: 국무조정실.
- 김성배, 김태주, 최용환 (2024).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전략적 의미 및 고려사항. 이슈브리프, 558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1-5.
- 김태균 (2024). 글로벌 사우스와 한국의 대아프리카 외교. 외교, 149호, 23-40.
- 농림축산식품부(MAFRA) (2025. 3. 27.). 아프리카 농업 혁신 이끈 K-라이스벨트, ‘24년 벼 종자 3562톤 생산으로 목표 3천톤 돌파. 보도자료.
- 오해령 (2026. 4. 30.). 한-민주콩고 공동위 개최...교역 500배 성장 기반 경제협력 심화. 뉴스케이 (NewsK).
- 박소영 (2025). 아프리카 광물 확보 경쟁 속 주요국 전략과 한국의 대응 방향. Trade Focus, 16호,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1-48.
- 박영호, 방호경, 정재완, 김예진, 이보안 (2016). 아프리카 도시화 특성 분석과 인프라 협력방안.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양지원, 김나을, 허슬비 (2024).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기념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Trade Focus, 20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1-41.
- 오일석, 조은정 (2022). “동맹을 가리지 않는 공급망 재편 경쟁: 미국 IRA와 EU의 RMA.” 이슈브리프, 409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1-5.
- 외교부(MOFA) (2024). Joint Declaration 2024 Korea-Africa Summit.
- 이머릭스 (2022). 아프리카 경제 위기 심각 부채 탕감 및 IMF 구제 금융 절실. 월간정세변화.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성규, 유학식, 김수인 (2023).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주요국의 탈탄소 정책과 청정에너지부문 협력방안.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유리 (2021). 교육을 통한 한국의 대 아프리카 공공외교 연구. 인문사회21, 12(5), 2349-2362.
- 이재훈, 김경하, 김은경, 서상현 (2019).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의 출범과 한국의 협력방안.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상화, 서창록, 유응조 (2012). 21세기 외교전략과 공적개발원조 정책. 2012 외교통상부 정책용역 보고서. 서울: 한국국제정치학회.
- 주재우 (2022). 글로벌 중추국가와 ‘평화의 한반도’ 비전 실현을 위한 제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한선이, 조성훈, 김예진, 김주혜, 서상현 (2024). 한-아프리카 자원 협력을 통한 핵심광물 확보 전략.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황규득, 장용규, 서상현, 허서희, 육숙희, 최두영 (2015).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시장 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황규득 (2026).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 한국의 대아프리카 ‘K-동반성장’ 전략 연구: 경제안보와 공급망 가치사슬(GVC)의 정합성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10(2), 167-194.
- AFP-Agence France Presse (2021). DR Congo Leader Seeks Review of Mining Deals with China. Sept 11, 2021.
- Alden, C. (2007). China in Africa. London: Zed Books.
- Alden, C., & Alves, A. C. (2009). China and Africa’s Natural Resources: The Challenges and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and Governance. Occasional Paper No 41, SAIIA.
- Aljazeera (2021. 9. 11.). DR Congo president seeks review of mining contracts with China.
- BTI (2026). Congo, DR Country Report 2026. Gütersloh: Bertelsmann Stiftung.
- CrossBoundary Advisory, & EITI (2026). The Lobito Corridor: A frontier for transition mineral partnerships in Africa. Oslo: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EITI).

- Cook, A. (2025. 9. 22.). Cobalt export quotas: DRC sets limits to rebalance global supply. Fastmarkets.
- EITI (2024. 3. 25.). (2024). Sicomin: How the EITI in DRC helped secure 4 billion in additional revenue.
- Energytransitionafrica (2025. 10. 29.). From Extraction to Industrialisation: Africa's Critical Minerals Value Chain.
- Fadiga, B. (2024). South Korea's Scramble for Diplomacy in African Development. Oxford, Mississippi: University of Mississippi.
- Hund, K., La Porta, D., Fabregas, T. P., Laing, T., & Drexhage, J. (2020). Minerals for Climate Action: The Mineral Intensity of the Clean Energy Transition. Washington, DC: World Bank.
- IEA (2023). Critical Minerals Market Review 2023.
- IEA (2025. 2. 22.). Temporary suspension of cobalt export from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International Energy Agency.
- Klingebiel, S. (2023). "Geopolitics, the Global South and development policy." IDOS Policy Brief No. 14, 1-10.
- Ochieng, H. K., & Kim, S. (2019). Cultural Exchange and Its Externalities on Korea-Africa Relations. East Asian Economic Review. 23(4), 381-407.
- OECD (2016).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of Minerals from Conflict-Affected and High-Risk Areas(3rd ed.). Paris: OECD.
- Resource Matters (2025). Congo's Cobalt Export Ban: A Short-Term Solution that calls for Structural Change. Brussels: Resource Matters.
- Reuters (2024. 5. 3.). Congo's \$7 billion infrastructure deal with China will depend on copper prices.
- Signé, L. (2023). Africa'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he White House (2022). U.S. Strategy Toward Sub-Saharan Africa.
- U.S. Department of State (2026a). Joint Statement on the Inaugural Meeting of the Joint Steering Committee of the U.S.-DRC Strategic Partnership Agreement, February 5.
- U.S. Department of State (2026b). Forum on Resource Geostrategic Engagement Guiding Principles, July 10.
- U.S Geological Survey (USGS) (2025).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25.
- World Bank (n.d.).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 World Bank (2020). The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AfCFTA).

Shifting Paradigms in Global Economic Security and South Korea's Strategic Approach toward Africa: Focusing on the Case of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RC)

Hwang, Kyu-Deug*

Abstract This study evaluates the geoeconomic value of Africa as a crucial partner for South Korea to expand its economic security architecture and diversify its supply chains amidst a restructuring global order marked by US-China hegemony and bloc formation. With rising supply chain risks for critical minerals essential to high-tech industries, the launch of the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AfCFTA) is accelerating a structural shift from traditional raw material exports to a “Regional Value Chain (RVC)” that maximizes local value addition. This paradigm shift calls for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Western extractive methods and China's one-way “infrastructure-for-resources” model. Consequently, this paper proposes the “K-Shared Growth” model—a value-sharing partnership that leverages South Korea's unique development experience and advanced manufacturing prowess to support Africa's autonomous industrialization. The efficacy and operational mechanisms of this strategy are empirically demonstrated through the case of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RC), the world's largest cobalt producer. The DRC government's resource nationalist policies and restrictions on unprocessed ore exports are currently constrained by chronic power shortages and a lack of domestic refining infrastructure. In this context, South Korea's “Resource for Technology (R4T)” model, which transfers eco-friendly, high-purity refining technologies alongside decentralized Energy Storage Systems (ESS), precisely aligns with the DRC's aspirations for domestic value addition. This mechanism establishes a reciprocal win-win framework wherein South Korean enterprises secure long-term, stable access to critical minerals, while the DRC upgrades its industrial structure and generates local employment. Furthermore, South Korea must strategically align with multilateral geopolitical logistics platforms such as the Lobito Corridor and the Forum for Open and Resilient Geoeconomic Engagement (FORGE) to mitigate investment risks, while fostering Africa's “Leapfrogging” through the transfer of smart infrastructure and digital fintech platforms. Concurrently, building a multi-layered G2G and PPP cooperation framework—backed by enhanced policy finance guarantees tied to ODA—is vital to lowering barriers for private sector investment. Finally, by proactively establishing tailored ESG standards, such as blockchain-based mineral traceability systems, South Korea can forge a “Clean Supply Chain” compliant with global frameworks like the US IRA and EU CRMA. In conclusion, by positioning itself as a genuine partner for growth and a reliable global pivotal state, South Korea will secure a robust economic security alliance to navigate the era of global polycrisis.

* Dean of the College of National Strategic Languages; Professor of the Division of Afric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UFS)